

## 위험관리

작년 9.11 테러사건 이후 각국에서는 테러관련 리스크 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를 소개한다.

### 1. 미국

다우존스는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4월9일호에서 미국의 테러리즘 관련 리스크의 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든 우씨는 작년 9월 미국의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테러공격의 특징과 빈도를 예측하기 위해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훈련프로그램과 테러관련 웹사이트를 면밀히 조사해 왔다.

그러나 그는 미 국방부(펜타곤)의 직원은 아니다. 그는 보험회사의 컨설턴트로 현재 테러행위 보상에 대한 보험료 설정 문제에 처해 있다. 이 문제에 직면해 그는 노벨상을 수상한 수학자 존 홉스 나슈 2세의 생애를 묘사한 최근 영화 「뷰티플 마인드」에서 유명해진 통계적 어프로치인 “게임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문 중에 그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테러공격의 빈도와 공격규모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망의 구조에 따라 변화되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잠수함 기능을 가진 고성능 군용 함선 유보트의 함대에 비유된다.

이 방법은 「테러리스트 집단의 내부사정을 파악하고 그들의 전술을 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또 테러리스트가 집단을 형성하는 행동과 과거의 공격특징, 또 알 카에다의 목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의해 보험료 설정 모델을 구축하는 요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모델 구축은 초기단계에 있고 그 작업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9월 11일의 동시다발 테러 공격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해 500억 달러를 웃도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간부들은 이제까지 테러리즘은 보통 부보대상이 되지 않는 리스크이고, 언더라이터는 테러리즘을 기업보험에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일부 보험회사는 테러보험을 고액의 추가적 보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고액이고 보상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테러관련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정부에 대해 테러관련 보험금 지급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테러보험 지원 프로그램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법제화를 향한 움직임은 이 프로그램이 보험업계를 자금으로 “구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

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이 우려를 표시하여 보험회사에 새로운 지불의무를 부담시키는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설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법제화를 위한 빠른 행보를 요구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연방 테러보험이 없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례를 들기 위해 백악관은 보험업계 간부를 소집, 보험사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과거의 발생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게임이론이 등장한다. 게임이론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적이 분쟁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흥미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구자가 이 이론이 테러리즘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대학의 톰·러셀 경제학부 교수는 「게임이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당사자가 충분히 구축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폭테러의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였다. 런던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솔루션스의 컨설턴트인 우씨도 테러리즘의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그와 다른 연구자는 게임이론이 테러리즘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필요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어떠한 빌딩을 공격 대상으로 할지 또 정부와 사업주가 방어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테러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이론을 기초로 한 보험부문의 모델링 중 놀랄만한 결과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통계적으로 예측한 경우, 뉴욕의 초고층 빌딩 등 테러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물의 테러공격에 의한 예상 손해액은 이보다 더 흔한 공격대상물의 손해와 같은 규모이다. 그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공격대상일수록 테러에 대한 방어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게임이론을 추구하는 재보험 브로커, 가이·카펜터의 부사장인 존·메이저에 의해 도출된 이 결론은 보험회사가 동시다발테러 이후에 도출한 결론과 매우 상이하다. 이제까지 보험회사는 테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물건에 대한 보험보상의 대가로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래서 다수의 부동산물건 소유자는 보험보상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많은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테러보험은 수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동시테러 이후 전쟁, 테러리즘과 관련된 보험보상으로 항공회사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동시테러사건 이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항공회사가 기본적인 패키지의 일부로서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시 요구하는 이 종류의 보험을 제공했었다. 미국의 항공회사가 고액이라서 구입을 보류하고,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테러관련 보험 요율은 별도의 테러관련 손해가 약 1년 반 후에 발생할 경우의 대략적인 추정계산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정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캠브리지대학교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공부한 수학자이며 「자연 재해의 수학」의 저자이기도 한 우씨는 작년 11월 보험회사가 테러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2월초에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개최된 National viewer of economics research insurance group 회의에서 제출하였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지진과 허리케인에 의한 보험손해를 추정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테러리즘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해 왔다. 또 정부 치안당국자 등 전문가의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이 장래 일어날 수 있는 테러 관련 손해의 빈도와 심각도를 예상하는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서 가이·카펜터의 메이저씨는 우씨의 견해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 게임이론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게다가 메이저씨는 게임이론은 「보험업을 고찰하는 것 외에 유익한 수단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험료의 설정에 게임이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도 이 이론을 실용적인 면에 적용하는 것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는 정부의 지원이 테러공격으로부터 클레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영국

작년 9월 11일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사건으

로부터 8개월이 지났지만 영국기업은 전과 다름없이 시장에서 테러관련 리스크 보험의 확보에 매우 고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및 보험회사와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보험 Pool제도(Pool-Re)의 확충제안을 협의했다. Pool-Re(재보험기구)는 아일랜드공화국의 연이은 폭탄테러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3년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는 항공보험을 포함하여 테러관련 보험에 지원을 확충하는 것에 신중하고 있으며, 시장이 자력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바라고 있다.

「시장이 적절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움직일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는 없다.」고 영국부동산연맹(BPF)의 이사로 있는 리처드 랜버트가 다우존스에 대해 말했다. BPF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용 부동산 분야에서 영국인 투자가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만일(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장은 테러관련 리스크를 부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정부에 대하여 지원확충이야말로 최후의 보루이며, 정부가 리스크 인수상태를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랜버트가 말했다.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양쪽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려 새로운 테러행위의 리스크에 노출된 위험성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기업은 최대 1,000%나 되는 보험료의 높은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며, 그 중에는 테러관련 보험을 완전히 손질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재무부 대변인에 의하면 정부는 이러한 기업

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에는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할 필요가 있다.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문제는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일부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테러리즘 관련 리스크 보험을 재차 제공하고 있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이 거느리고 있는 패넬을 포함하여 일부의 보험회사는 현재 항공회사에 대하여 테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회사에 대한 정부의 긴급보험원조는 5월 말로 기한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달 초에 알리안스 AG 홀딩스와 추리히 파이낸셜을 포함, 유럽의 보험회사가 재물보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중단이나 테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배상 책임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리안스에 의하면, 새로운 보험회사는 정부가 중심이 된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고, 이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한다.

BPF나 영국 소매업자 단체의 영국소매연맹은 Pool-Re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Pool-Re는 테러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상업용 부동산에 재보험을 설정했다. 현재는 화재와 폭발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여 보험보상이 제공되지만, 기업의 리스크 관리자는 테러리즘에 기인하는 모든 손해에도 적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일부 기업은 Pool-Re가 고용자배상책임 등의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광고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Pool-Re를 둘러싼 논의에서

는 이와 관련된 답안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재무부도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Pool-Re의 지불준비금은 대략 13억 파운드르 정부는 이 자금이 바닥이 날 경우에 재보험자 자격으로서 개입하여 인수한다. Pool-Re가 창설된 후 정부가 개입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한편 항공회사는 정부에 대하여 Pool-Re와 유사한 형태로 유럽 전역을 망라하는 항공보험 운영결정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민간보험회사는 항공회사에 대한 테러보험 제공에서 손을 뗐다. 항공회사가 여객기의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국정부와 브로커는 제3자 전쟁·테러리즘 관련 리스크를 인수하는 긴급대응 보험회사 「트로이카」를 설립했다. 다른 유럽의 정부도 같은 양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가맹국의 교통부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5월말까지 테러보험의 제공을 인정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미국에서와 같은 조치에 준하는 것이지만, 이 지원책이 거듭하여 연장될 공산은 적다. 유럽항공협회(AEA)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대응책에 대신할 자기들만의 Pool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최초의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 협회에서는 시장에 제안된 해결책으로 항공회사가 연간 6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 AEA는 승객 1인당 0.50 유로 내지 0.75 유로의 강제적인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에 의해 최대 15억 달러의 보험을 제공하는 펀드의 설립을 제안했다. 미국도 '에퀴다임' 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 Pool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버진 어틀랜틱 에어웨이

의 그룹 리스크 인슈어런스 매니저로 있는 레이나 세이버트씨는 AEA의 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말한 것은 펀드가 설립초기의 단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략 10억 달러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데에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세이버트씨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업계의 주장과 제안을 들었지만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시장베이스로 경쟁원리에 기초한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하는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 홍보담당자가 말했다.

### 3. 독일

독일정부의 슈뢰더 총리는 지난 4월26일 동시다발테러 같은 거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보사 뿐 만이 아닌 국가가 보상을 하는 새로운 협정에 대하여 보험업계와 산업계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의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테러리즘에 의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특수한 보험회사 「엑스트렘즈(주)」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손해액이 30억 유로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지만 30억 유로를 초과하여 130억 유로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를 보상한다.

「엑스트렘즈」의 활동기간은 일단 3년으로 한정된다. 담보되는 손해는 화재, 폭발 등 재물에 대한 피해와 그것에 의해 발생된 이익의 상실에 한정된다. 또, 이 협정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보험금액이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형물건에 한정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보험료 수준과 국가와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에 교섭 중이다. 다만, GDV(독일보험협회)에서는 대부분의 테러피해는 30억 유로 이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은 보험업계로 흘러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슈뢰더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테러에 의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산업계와 보험업계는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지만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따라 독일 기업도 영국·프랑스의 기업과 같은 조건을 손에 넣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단, 독일산업연맹(BDI)에서는 「3년 간이라고 하는 기간의 한정과 영국과 프랑스처럼 정부보상액에 상한이 없는 시스템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산업계가 이번 합의내용에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든 동시다발테러 이후 독일의 많은 고액기업물건이 테러 피해에 대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상사태에 중지부를 찍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로부터 평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일본보험매일신문 2002.4.23/5.9

— 정리: 경영기획부 대리 유성기